

■ 지방 없는 나라는 없다

④ 수도권만 살찌우는 광역경제권 안된다

지방경쟁력 살린 후 수도권 규제 풀어야

‘지방 죽이기’ 실제 드러나 동남권도 불복종 운동

낙후지역 SOC확충 등 민자 유치 환경 조성 시급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찰, 혁신 도시는 어음’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바로 수도권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알 수 없는 혁신도시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는 지방의 절박한 ‘항의’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유일한 지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5+2광역경제권’ 구상은 무엇인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전국을 7개 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이 구상에 대해 한 때 열렬히 환영했던 시·도들이 최근 당황해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기던 ‘동남권’의 부산·경남·울산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정

객불복종 운동까지 시작됐다. 혁신 도시 재검토 논란이 불거지면서 광역경제권 구상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하는 ‘지방 죽이기’ 정책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광역경제권 개발은 수도권을 포함한 5대 경제권이 동일한 위상에서 규제완화와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를 예견한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진입이 허용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권역은 인프라 부족 등 산업여건 미흡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광역권별 주요 경제현황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인구(천명)	49,624	24,127 (48.6)	4,989 (10.1)	5,253 (10.6)	5,231 (10.5)	7,947 (16.0)	2,078 (4.2)
면적(㎢)	99,954	11,783 (11.8)	16,571 (16.6)	20,627 (20.6)	19,910 (19.9)	12,341 (12.3)	18,721 (18.7)
지역내총생산(십억원)	815,289	386,348 (47.4)	91,005 (11.2)	82,883 (10.2)	84,597 (10.4)	140,474 (17.2)	29,982 (3.7)
제조업업체개	340,183	176,902 (52.0)	26,981 (7.9)	27,453 (8.1)	42,467 (12.5)	57,797 (17.0)	8,583 (2.5)
제조업 종사자(명)	3,450,893	1,694,840 (49.1)	354,275 (10.3)	241,003 (7.0)	420,497 (12.2)	689,578 (20.0)	50,700 (1.5)
내국세 징수액(억원)	782,219	562,000 (71.9)	55,676 (7.1)	34,849 (4.5)	45,898 (5.9)	66,969 (8.6)	16,727 (2.1)
지방세 징수액(억원)	359,774	207,201 (57.6)	31,673 (8.8)	25,301 (7.0)	31,064 (8.6)	51,630 (14.4)	12,904 (3.6)

수도권은 다른 6개 경제권을 합친 것보다 세력이 크다. 지금도 매년 20만명씩 인구가 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로 교통·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국가 경쟁력을 오히려 깎아 내릴 것이라는 지적도 많

다. 실제 영국의 시사종합지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127개 도시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은 55위를 차지했다. 근본적 원인은 과밀이었다. 반면 광주·전남·북으로 구성되는 ‘호남권’은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업체와 종사자 수, 내국세·지방세 징수액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한참 뒤

져있다.<표>

대규모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권역별로 공모한다면 당장의 수이나 경제성이 취약한 호남권은 번번이 고배를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전제 조건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호남권처럼 경제력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선발·유인투자를 집중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주도의 광역경제권 추진체계를 갖추고 ▲비수도권의 국제 대외비율 등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한편 ▲비수도권을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先) 지방경쟁력 강화,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로 지역정책을 수정·보완하라는 주문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야 3당 ‘쇠고기 청문회’ 합의

진상규명 미진엔 국정조사 실시키로 사상 최초 야 단독 청문회 개최 주목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민생을 위면해선 안 된다”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 ▲검역 주권 문제 ▲축산 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과 보완대책 등 5가지

주요 쟁점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또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한나라당에 청문회 참여를 촉구했다.

야 3당이 쇠고기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부정적 입장이라서 국회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청문회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인 원내 제 1당이고 여기에 선진당, 민주노동당도 합치면 과반을 넘겨 한나라당의 참여 없이도 청문회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석 옆에 있는 한나라당은 야 3당의 청문회 개최 추진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악의적인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있

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탈레마를 간파한 민주당 등 야 3당은 청문회를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합의만 한 채 이번 주까지는 한나라당의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25일 까지 한나라당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초반인 오는 27일이나 28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여할 경우 농해수위 등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식 청문회를 꾸려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 농해수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시중, 농해수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권을 의원이고 이병호·김철호 의원 등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농해수위에 대거 포진해 있어 진풍치가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당 등 야 3당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가 무산되거나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조사라는 좀 더 강도높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되고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줄 건 다주고 뭘 받았나”

민주 지도부, 농식품부에 쇠고기 문제점 질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당산동 당사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대표 등은 쇠고기 협상이 총선 직후 시작된 것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직전 타결된 것과 관련, 총선을 피하고 방미 선물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협상이라는 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 데 무엇을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정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 대책은) 이

미 하고 있던 것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뒤 “광우병 문제를 복에서 독만 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협상은 ‘참’이라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은 검역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5월말 OIE(국제수역사무국) 국제 기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원칙을 정하고 (협상)하자고 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아무 일도 안된다”며 반론을 펼쳤다.

박홍수 사무총장이 “미국측에 (쇠고기) 전수 검사를 요구했다. (미국측) 조건을 다 들어줄테니 전수검사라도 하라는 조건은 왜 못 걸었나. 잔류물질은 어떻게 검사하느냐”며 파고들자 농식품부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박 사무총장은 미국이 사



민주노동당 천영세(오른쪽부터), 통합민주당 김효석,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희뉴스

료정책 강화 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키로 했다는 농식품 관계자의 설명에 “미래를 예측해 미리 규제를 풀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미국에 요구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협상기술의 부재를 질책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해도 OIE 역학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통관이라도 보류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따졌다.

차령 대변인은 “주부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음엔 데 단체급식과 인스턴트 식

품에 쇠고기가 주원료로 표시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권리를 찾는다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 소값 안정기준가 상향 요구

한나라당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상향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송아지 값이 떨어질 경우 지원해주는 기준가격을 170~180만원으로 올려달라”며 “농민단체의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한 범위에서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보전해 주고, 브루셀라에 감염돼 살처분 할 경우 보상 수준을 100%까지 올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당 규모를 100㎡에서 40~50㎡로 줄여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 현지 도축장에 전문가를 포함한 실시간 파견 등 5개 항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KTR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R)은 화학제품의 품질검사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위해 다양한 화학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대매매 대용 전문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광양만 지원 개원

2008년 4월 24일 개원

광양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광양만 지원을 개원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제품 품질검사와 분석
-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
- 화학제품의 환경 영향 평가

문의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10-7701-1111) / 광양만 지원 개원팀

1. 화학제품 품질검사와 분석

화학제품의 품질검사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위해 다양한 화학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위해 다양한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화학제품의 환경 영향 평가

화학제품의 환경 영향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위해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